

# 2015년 민간투자기본계획 - 어떤 내용 담았나

박용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yspark@cerik.re.kr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경제 전망을 당초 3.3%에서 3.1%로 낮추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리 인하 등의 정책 추진을 해야만 3%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투자 전망치도 당초 2.9%에서 1.8%로 낮추었다. 현재, 이들 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물가와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크다

는 특성을 갖고 있다.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과거 경제 규모가 작을 때에나 유효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 대안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건설투자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와 공기업의 부채 문제로 이들을 통한 건설투자 확대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족한 재정 투자를 보완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회기반시

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민간투자기본계획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2015. 4. 8)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민간투자기본계획」(2015. 4. 20)을 공고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을 분담하여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제3의 방식인 위험분담형(BTO-rs : Build Transfer Operate-risk sharing) 방식과 손익공유형(BTO-a : 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을 분담(예 50 : 50)하는 것이며, BTO-a는 정부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용의 일부(예 컨대 시설 투자비의 70%)를 보전하여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용 요금도 인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상 추진이 곤란했던 상수관망 개선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 경전철 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을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최다 출자자인 건설사가 민자 SPC의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 기간 동안 계열회사 편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셋째, 민간제안사업의 제출 서류를 1/2 수준으로 간소화(기본설계→기본계획)하고, 민간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비용 보상 금액도 40%에서 50%로 상향하며, 최초 제안자 우대 점수를 현행 총점의 1%에서 2~3% 수준으로 현실화시켰다. BTO 사업의 최소 자기자본비율(건설 기간)도 20%에서 15%로 완화하기로 했다.

넷째,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쟁적

협의란 주무 관청이 복수의 입찰자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서 최종 낙찰자 선정에 이르는 입찰 방식이다. 기존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도 공고안과 실시협약안을 동시에 작성하는 등 기간을 단축하여 시설물의 조기 완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섯째, 도로, 철도, 환경 등 이용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등 민간 투자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의 경우 예비타당성 신청 단계부터 민자 절차로 진행하여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섯째, 민간 투자 대상 사업에 공공 청사를 포함하고,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 개발(관공서+문화센터+임대 사무실 등)이 가능토록 「민간투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일곱째, 부대사업의 위험에 상응하는 별도의 수익률을 설정하고, 일정 조건하에 예외적인 해지지급금을 허용하여 부대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덟째, 토지선보상제도를 국가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토지선보상제도는 사업자가 주무 관청을 대신하여 보상비를 먼저 투입하고, 주무 관청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조달 비용

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현행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자 SPC의 부채상환 적립금을 기업소득 환류세제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시설의 건설 용역,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현행 2015년 12월)을 연장할 계획이다.

#### 올해 86건 6.7조원 집행 계획

민간투자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5년도 주요 분야별 민간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다.

도로는 운영 중인 사업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 재조달을 추진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철도는 인천공항철도 등 운영 중인 사업의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환경시설은 하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 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시설의 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시설은 기숙사 건립 및 특성화 대학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국방시설은 병영시설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지는 공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현황

제안 일자	대표 제안자	주요 내용
2015. 1. 22	강동원 의원	•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택시 공영 차고지 포함
2014. 5. 19	김장실 의원	•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포함
2014. 4. 10	김태원 의원	•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사 포함
2013. 11. 6	이한구 의원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 허용 •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중앙 행정기관의 청사, 헌법기관의 청사 및 교정시설 포함
2013. 8. 9	김정록 의원	•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화장시설 포함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료 수행을 위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의 신축을 추진하며, 문화·관광시설은 생활 친화형 문화시설 및 복합 시설의 신규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5년도 민간 투자비는 BTO 방식 4.6조원, BTL 방식 2.1조원 등 총 6.7조원(86건)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협조 절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BTL 사업의 민간 제안을 허용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 관련 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열거하는 49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만약 민간 투

자가 필요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을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노후 위험 시설 보강에 적용 추진도**

SOC 시설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2종 시설물 중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기간 시설물은 1,860개(건축물 제외)로 전체 시설물 1만 9,543개 중 9.5%를 차지하며, 5년 후에는 2,921개(14.9%), 10년 뒤에는 4,211개(21.6%)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학교, 도로, 철도, 교량, 터널 등 잠재적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함께 보수·보강·성능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을 재정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지만, 모든 시설을 재정으로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적시의 개·보수 추진의 어려움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방식의 적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 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데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CERIK